

#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 간의 영향관계 분석: 규제수준 인식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이 민 호\*\* · 서 성 아\*\*\* · 강 문 선\*\*\*\* · 배 정 윤\*\*\*\*\*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높은 준수 수준으로 당연히 이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피규제자인 기업이 만족도와 규제준수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책만족과 정책준수 간의 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규제에 대한 기업의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 정도가 어떠한 영향관계를 갖고 있으며, 제3의 변수로서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71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된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규제만족도가 규제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타인의 규제준수 인식에 대한 분석에서 제한적으로 나타

\* 본 논문은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도 규제실태조사 연구보고서인 「규제준수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의 일부를 발전시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1저자, 교신저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235 한국행정연구원 407호 (mhlee@kpa.re.kr)

\*\*\*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팀장, 공동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연구원, 공동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센터 연구원, 공동저자

접수일: 2022/6/7, 심사일: 2022/6/16, 게재확정일: 2022/6/24

나고 있는 반면, 본인의 규제준수 인식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암묵적 영향관계로 해석하였다. 타인을 통해 비춰본 규제준수 인식에서는 규제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변수라고 분석되고 있으나, 정작 본인의 규제준수 인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타인의 규제준수와 달리, 본인의 규제준수에 대해서는 규제자와의 교환적 관계를 낮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규제만족도는 낮게 응답하고 있으나, 본인의 규제준수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강조하여 응답하고 있는 사례들을 고려하면, 원칙적이지만 다소 형식적인 규제준수의 행태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규제수준의 인식에 따른 영향에서도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규모나 부담수준에 따른 부정적 요인을 크게 인식할수록 적극적인 규제준수를 응답하고 있다. 물론 개인적 차원의 규제만족 정도에 따라 규제준수 수준을 결정하는 교환적 관계모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높은 규제부담과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규제준수 수준을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형식적인 법규 중심의 규제준수가 만연할 가능성을 우려케 한다. 실질적인 규제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규제만족도, 규제준수, 규제규모, 규제부담

## I. 서론

새로운 정부의 등장과 함께,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 규제개혁 추진이 강조되고 있다.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현행 규제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1) 규제만족도의 저하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저해하여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규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규제만족도를 경제 활성화의 목적 외에, 정부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제만족도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정부규제의 효과성은 규제를 통해 기대하는 사회적 소망성의 달성 정도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규제설계의 타당성을 전제한다면, 규제준수의 정도가 규제효과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실제로 각종 안전사고 등의 발생 원인으로, 관련 규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규제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 공식적 제도로 정의되며(North, 1990), 사회구성원들이 규제에 대해 갖는 인식과 태도는 규제의 성립과 존속의 기반이 된다. 특히 피규제자인 기업이 규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태도는 규제준수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

- 
- 1) 전경련 보도자료, “21년 규제개혁체감도 92.1로 작년대비 1.7p 하락, 3년간 최저치”, 2020.6.14. ([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View.aspx?content\\_id=ebf9ee73-5cd4-4cc6-a751-f554e55581af&cPage=&search\\_type=0&search\\_keyword=](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View.aspx?content_id=ebf9ee73-5cd4-4cc6-a751-f554e55581af&cPage=&search_type=0&search_keyword=))
  - 2) 경향신문, “HDC현대산업개발 건설현장 12개소에서 위반사항 636건 적발...노동부, 안전책임자 ‘입건’”, 2022.3.16.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3161108001#c2b>)

한 맥락에서 기업의 규제만족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물론, 규제효과성 제고를 위한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인 정책 순응이나 규제순응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의가 아니라 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순응(compliance)은 해당 정책이나 규제에서 요구하는 행위를 따르면서도 내면적인 동의나 수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인식 및 태도의 측면과 준수활동의 측면이 함께 어울리고 있다(이시철, 2005: 348). 과거 2003년에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규제순응도 조사지침에서도, 규제 인식도와 규제인정도, 규제준수도를 포괄하여 규제순응도로 이해하고 있다. 정책순응이나 규제순응에 대한 관심은 순응활동이 해당 정책이나 규제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비롯되었으며, 정책대상자의 순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변인들과 전략들을 모색하는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강제상·김종래, 1999; 소영진, 1999; 김태윤, 2000; 박경효·정운수, 2001; 이시철, 2005).

그러나 규제순응에 포함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실제 규제준수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정책과 달리, 피규제자에 대해 명시적인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정책의 경우에는 피규제자의 인식 및 태도와 규제준수 행위가 괴리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 규제순응에서 강조하는 내면적인 동조가 규제만족도의 개념과 동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이시철, 2005: 348). 내면적인 동조가 주로 규제정책의 필요성 등 정부의 입장이 강조되는데 비해, 이른바 기업의 규제만족도는 순전히 피규제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규제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업의 규제만족도가 기업의 규제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규제수준에 대한 고려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피규제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에 대한 판단과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규제규모와 규제부담 등 규제수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규제순응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순응에 따른 비용부담을 강조하고 있으며(Winter & May, 2000; 이시철, 2005: 356에서 재인용), 기업의 규제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규모 규제완화 정책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규제규모나 규제부담 등 규제수준은 규범적 측면이 아닌 기업의 계산적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요소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고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규제에 대한 기업의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 정도가 어떠한 영향관계를 갖고 있으며, 제3의 변수로서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71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된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접근에서는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및 규제순응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을 중심으로 한 관계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의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결과의 해석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 II. 이론적 접근

### 1. 규제만족도와 규제정책의 고객 중심적 접근

일반적으로 정책만족도는 정책활동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으로 정의되며, 정책활동이 최종 수요자인 국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측정하는 방안으로 이해된다(박중훈·김판선, 1996; 최선마·김태형, 2020: 128에서 재인용). 불특정 다수로서의 국민보다는 해당 정책의 최종 사용자(end-user)로서 국민이 해당 정책활동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는 점에서, 고객(customer/client)에 의한 성과의 인식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달리, 정부정책은 고객의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상당히 포괄적인 대상이 해당되며, 해당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해서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특정 정책의 정책만족도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는 부분보다 정책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었다(DeHoog et al., 1990; 박정호, 2011; 최선마·김태형,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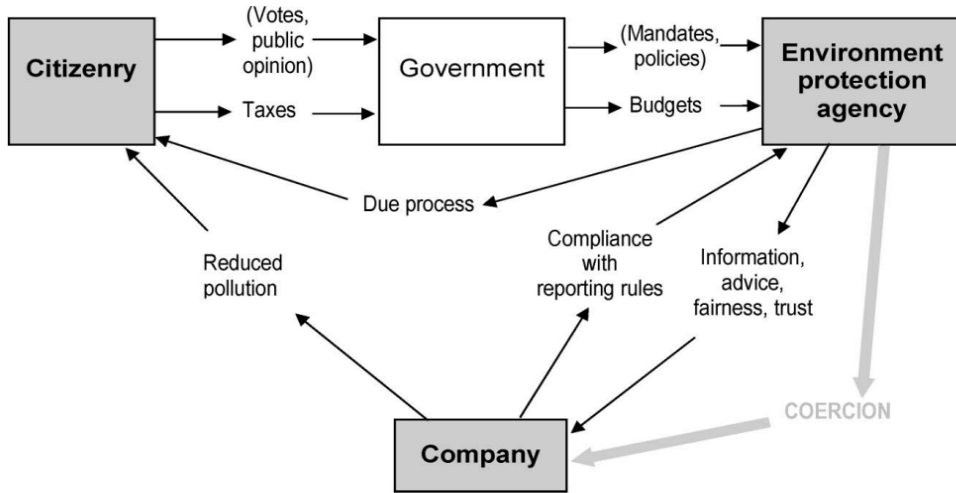
기업의 규제만족도는 일반적인 정책만족도 개념의 하위 분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책만족도와 달리 기업의 규제만족도는 다르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즉, 정책만족의 주체인 기업은 주로 피규제집단으로 분류되며, 정부규제에 대한 비용 부담자의 입장에서 규제의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정책만족도의 논리 구조에서 고객인 국민이 세금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정책서비스를 공급받는 교환관계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 기업의 규제만족도에서는 고객인 기업이 규제비용을 지불하지만 규제에 따른 편익은 다른 기업이나 일반국민이 누리게 된다. 고객만족도의 개념 정의를 기준으로 하자면, 기업의 규제만족도에서는 고객이 평가해야 할 성과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규제만족도라는 용어보다 규제개혁 만족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규제개혁 만족도에서는 규제정책의 성과가 아닌 규제개혁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이민호·이종한·임동진, 2008).

이에 대해, Alford & Speed(2006)는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피규제자인 기업과 규제기관 간의 교환적 관계를 통해 고객 중심적 접근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규제기관으로부터 규제의무가 강제(coercion)된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교환관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령을 통해 규정된 규제의무가 피규제자인 기업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규제기관이 제공하는 규제정책에 대한 정보나 지원, 공정한 업무처리, 규제적용의 신뢰성 등의 다양한 교환 자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은 규제의 순응(compliance)이라는 자신의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교환관계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Alford & Speed, 2006: 322-323).

법령에 따라 의무가 부여되고 강제되는 규제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규제기관과 피규제 집단인 기업 간의 교환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규제개혁 만족도가 아닌 기업의 규제만족도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교환자원으로서 규제의 순응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규제기관과 기업, 시민 간의 사회적 교환관계 모형



출처: Alford & Speed (2006), p.323.

## 2. 규제순응과 규제준수에 대한 개념적 이해

일반적인 정책집행 연구가 정책결정자로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정책내용이 전달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비해, 규제정책에서는 규제집행 단계를 넘어 해당 규제정책이 적용되는 피규제집단까지의 전달을 더욱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순응 (compliance)이라는 개념은 지원정책 등 다른 정책유형에 비해 규제정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순응은 규제정책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는 행위로 이해되며, 규제순응의 확보는 성공적인 규제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점에서 규제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정책추진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진행되었다(강제상·김종래, 1996; 소영진, 1999; 김태운, 2000; 박경효·정윤수, 2001; 한승준, 2002; 윤종철, 2004).

규제순응의 요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결국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동기요인을 중심으로 모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시철(2005)의 연구에서는 규제순응의 요인을 개인적 동기 차원에서 다음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정책의 내용이며, 정책의 소망성 차원에서 정책 자체의

내용이나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계산된 동기(calculated motivations)이며, 불응에 따른 제재 등을 포함하여 순응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분석 결과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셋째, 규범적 동기(normative motivations)이며, 공공의 규칙이나 규범에 관한 도덕적 책무를 중요한 순응의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동기(social motivations)이며, 이웃이나 동료 등 사회적 준거집단에 따른 영향요인을 의미한다. 다섯째, 능력 동기(capacity to comply)이며, 순응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며, 경제적 측면 외에도 규제내용의 인지적 측면도 능력 동기의 관점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소(demographic elements)로 개인의 기질이나 특성, 상황조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이시철, 2005: 355-358).

그런데, 이러한 규제순응의 개념은 단순히 규제정책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따르는 행태적 측면 외에 내면적인 동의나 동조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규제순응은 규제에 대한 개인의 능동적인 인식과 판단을 전제로 순응이라는 행동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전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순응과 규제준수의 개념을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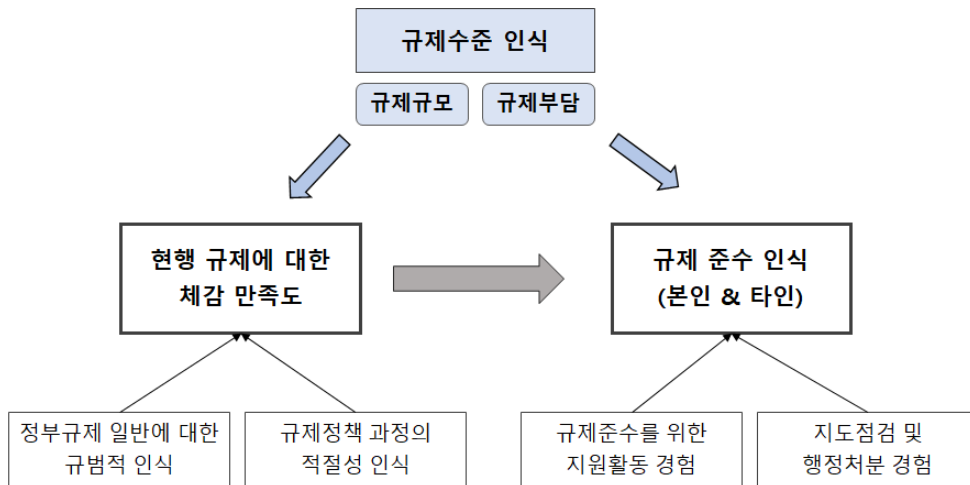
많은 경우에 규제순응과 규제준수를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하는 편이지만, 규제준수는 규제순응과 달리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에 강조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태윤(2000)은 규제순응과 별개로 규제준수를 “규제정책의 내용이나 지침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비해(김태윤, 2000: 28), 규제순응은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김태윤, 2000: 16). 미미한 차이일 수 있으나,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표현에서는 개인의 인식과 판단에 대한 요소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규제준수를 형식적 기준에서 접근할 경우, 규제준수의 유형을 법규에 대한 준수(rule compliance)와 실질적 준수(substantive compliance)로 구분할 수 있게 한다(김태윤, 2000: 25). 규제의 실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피규제집단의 행태변화를 전제하는 실질적 준수를 규제순응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모형 및 가설의 구성

앞선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 간의 관계분석을 위한 모형을 구성하였다. 현행 규제에 대한 만족도가 규제준수로 나타나는 기업의 대응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하며, 이는 Alford & Speed(2006)가 제시한 규제기관과 피규제자의 교환적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규제만족도라는 내면적 동의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실질적 수준의 규제준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관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형식적 규제준수와 실질적 규제준수를 구분하고 있는 김태윤(2000)의 규제준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그림 2〉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 간의 관계분석을 위한 모형



피규제자인 기업의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을 변수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규제수준은 정부규제의 양적 측면을 의미하며, 규제규모 및 규제부담 수준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규제만족도에 대해서는 정부규제 일반에 대한 규범적 인식과 함께, 절차적 측면에서 규제정책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변수로 포함하였다. 반면, 규제준수에 대한 영향요인

으로는 규제기관에 의한 지원활동 경험이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경험을 변수로 구성하여, 외부적 집행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H1. 현행 규제에 대한 만족도는 규제준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규제수준의 인식은 규제준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1 규제수준의 인식은 규제준수 인식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은 본 연구의 주된 가설로, 기업의 규제만족도가 규제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H1.1은 규제규모와 규제부담이라고 하는 규제수준의 인식이 규제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며, 규제만족도를 통한 간접적 영향관계를 포함한다. H1.1.1은 규제수준 인식이 규제만족도를 통해 규제준수 인식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외에, 직접적으로 규제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규제비용과 관련한 경제적 요인이 규제준수 인식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 III. 실증분석

####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의 규제 만족도 수준이 규제 준수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주요한 연구문제로 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규제규모나 규제부담에 대한 규제수준의 인식에 대한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규제수준에 따른 만족도와 준수율에 대한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RegSat_i = \alpha + \beta_1 RegAmt_i + \beta_2 RegCog_i + \sum \beta_j X_{ij} + \epsilon_i \quad \cdots \textcircled{1}$$

$$RegCom_i = \alpha + \beta_1 RegSat_i + \beta_2 RegAmt_i + \beta_3 RegCog_i + \beta_4 RegImp_i + \sum \beta_j X_{ij} + \epsilon_i \quad \cdots \textcircled{2}$$

$RegSat_i$  : 기업  $i$ 의 현행 정부규제에 대한 체감 만족도

$RegCom_i$  : 기업  $i$ 의 기업활동 관련 정부규제에 대한 준수율(본인, 동종업체 기준)

$RegAmt_i$  : 기업  $i$ 의 규제수준 인식 정도(규제규모 및 규제부담)

$RegCog_i$  : 기업  $i$ 의 정부규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규범적 필요성 및 정책과정의 적정성)

$RegImp_i$  : 기업  $i$ 의 규제집행 관련 경험 정도(지원활동 및 단속처벌)

$X_{ij}$  : 기업  $i$ 의 일반적 특성(업력, 업종, 소재지, 중소기업 여부, 종사자규모, 응답자 직급)

먼저 ①의 식은 규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정부규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규제 부담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회귀식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규제에 대해 갖고 있던 일반적 인식 수준을 통제하였을 때, 규제규모나 규제부담 등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이 규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종속변수인 규제만족도는 현행 정부규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단일문항을 통해 조사되고 있으며,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현행 정부규제에 대한 체감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정부규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정부규제의 필요성을 규범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함께, 정부규제 정책과정에서의 적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정부규제에 대한 규범적 인식에 대해서는 총 10개의 설문문항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문제 해결이나 차별 완화, 상품의 질 보장, 안전 제고, 투자 증진, 기업경쟁력 제고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기업부담 증가, 서류작성 증가, 혁신의 장애물, 기업성장 방해와 같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였다. 부정적 문항에 대해서는 역코딩을 통해 개별 기업의 정부규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를 각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과정의 적정성은 정부가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에 대한 총 8개의 설문문항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규제정보 수집의 충분성이나 목표의 명확성, 다양한 대안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업상황의 이해, 규제타당성의 검토, 국제적 기준의 고려, 집행자원의 확보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를 각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은 규제규모와 규제부담에 대한 기업의 인식정도로 측정되었으며, 기업활동과 관련해 적용되는 정부규제의 전반적인 규모의 정도와 전반적인 정부규제

를 준수하기 위한 부담수준을 각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서 해당 기업의 업력과 업종, 소재지, 중소기업 여부, 종사자 규모 등 기업의 일반적 특성변수를 조사하여 포함하였다. 또한 기업단위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답자의 직급 수준을 추가적인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②의 식은 규제준수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기업의 정부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규제집행과 관련한 경험수준을 통제한 상황에서, 규제만족도와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이 규제준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준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집행과 관련한 경험수준을 통제하고 있으며, 규제만족도에 따라 규제준수 인식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해당 모형에서 규제준수 인식은 정확히 말해 규제준수 수준을 의미하며, 정부규제 전반에 대한 준수 수준을 5점 척도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 응답자 개인 차원의 규제준수 수준과 구분하기 위해 “기업활동과 관련해 적용되는 정부규제”로 한정하고 있다. 규제준수 인식은 본인의 입장에서 측정되는 방식과 함께, 동종업체들의 준수수준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집행과 관련한 경험 정도는 정부의 규제집행과 관련한 지원활동(예: 정보제공, 비용지원 등)에 대한 경험 정도와 지도·감독 및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경험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집행지원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집행기관 외에 협회 등 동종업체, 기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단속 및 처벌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집행을 위임받은 공공기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각각에 대한 응답결과를 평균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의 영향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1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전국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종사자 1인 이상인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산업과 지역적 특성을 기준으로 할당추출 하였으며, 최종 응답된 유효표본 규모는 718개이다. 전국 단위의 조사이지만, 각 업종 및 지역별 차이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제조업(화학) 및 제조업(화학 외) 등 총 7개 업종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구분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sup>3)</sup> 업종과 지역을 기준으로 비비례 할당추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사업체 특성과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 목적에 따른 각 사업체 유형별 차이를 비교하기에는 적절한 표본 선정과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응답대상 업체 기본 통계

업종	제조업(화학)	106(14.8%)	숙박/음식업	91(12.7%)
	제조업(화학 외)	109(15.2%)	정보통신업	105(14.6%)
	건설업	108(15.0%)	금융/보험업	90(12.5%)
	도매/소매업(유통업)	109(15.2%)		
지역	수도권	363(50.6%)		
	비수도권	355(49.4%)		
중소기업	소기업/중소기업	478(66.6%)		
	중견기업/대기업	240(33.4%)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79(11.0%)	100-200인 미만	125(17.4%)
	5-50인 미만	243(33.8%)	200인 이상	209(29.1%)
	50-100인 미만	62(8.6%)		

## 2. 분석결과

먼저,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집단 간 비교 목적에서 표본추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결과를 일반적인 기업의 규제만족도나 준수를 수준으로 확장하여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조사대상 718개 업체의 평균적인 규제만족도는 2.60점으로 보통에 해당하는 3.00점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에 비해 규제준수 인식은 본인 기준에서 3.66점, 동종업체 기준에서 3.45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규제규모 및 규제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각각 3.41점과 3.44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전반적인 규제규모가 많고, 규제준수에 대한 부담도 큰 편으로 응답하고 있다.

3) 주요 규제업종에 대한 정성적 판단을 통해 7가지 업종을 선정하였으며, 제조업 가운데서도 화학물질 관련 규제적용의 차별성을 고려하기 위해 제조업(화학)과 제조업(화학 외) 업종을 구분하였다. 지역 역시 개별 광역적 특성보다는 수도권 규제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 결과적으로 업종과 지역에 따라 총 14개 유형에 대해 50개 정도의 표본추출을 계획하여 700개의 유효표본을 설계하였다.

〈표 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조사 결과

항목		평균	표준편차
현 정부의 규제수준에 대한 만족도		2.6031	0.8805
규제준수 인식	기업활동 관련 정부규제 준수(본인)	3.6588	0.7935
	기업활동 관련 정부규제 준수(동종업체)	3.4471	0.7179
규제수준 인식	기업활동 관련 정부규제의 규모 인식	3.4109	0.8514
	기업활동 관련 정부규제 준수부담 인식	3.4443	0.7792
정부규제에 대한 규범적 인식		2.7114	0.6415
규제정책과정의 적절성 인식		2.6408	0.8243
규제준수지원 경험 정도		2.9336	0.6741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경험	지도점검 및 단속 경험 정도	2.7256	0.8124
	행정처분 경험 정도	2.3561	0.9315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 그리고 규제수준 인식에 대한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본인 및 동종업체를 기준으로 한 상관관계 분석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규제수준 인식에 대해서는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규제규모나 규제부담의 인식수준과 규제만족도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규제준수 인식에 대해서는 반대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규제규모나 부담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규제만족도는 낮아지는 반면, 규제준수 인식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규제만족도는 규제준수 인식과 무관할뿐더러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은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에 각기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앞선 이론적 접근에서 예상한 분석모형과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해된다. 특히, 규제준수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규제준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를 통한 해석이 필요하다.

〈표 3〉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 규제수준 인식 간의 상관관계 분석

(n=718)		규제만족도	규제준수 인식		규제수준 인식	
			본인	동종업체	규제규모	규제부담
규제만족도		1	-0.048	0.043	-0.413***	-0.294***
규제준수 인식	본인	-0.048	1	0.511***	0.299***	0.318***
	동종업체	0.043	0.511***	1	0.222***	0.213***
규제수준	규제규모	-0.413***	0.299***	0.222***	1	0.483***
	규제부담	-0.294***	0.318***	0.213***	0.483***	1

주) \*\*\*:  $p < 0.01$ , \*\*:  $p < 0.05$ , \*:  $p < 0.1$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 그리고 규제수준 인식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다음은 규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모형①-1에서는 규제수준 인식에 대한 변수를 제외하여 분석하였으며, 정부규제에 대한 규범적 인식이나 정책과정의 적절성 인식이 전반적인 현행 정부규제에 대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①-2에서 규제규모 및 규제부담에 대한 변수를 추가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규제만족도 수준은 정부규제의 필요성이나 정책과정의 적절성과 같은 일반적인 인식수준과 연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규제에 대해 규범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측면과 함께, 정책과정에서의 적절한 품질관리 노력에 대한 부분도 만족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모형①-2의 규제규모 및 규제부담에 대한 변수를 포함한 분석 결과에서, 규제부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규제규모가 많다고 인식할수록 규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4)</sup> 기업 입장에서 정부규제의 양적인 수준을 크게 인식할수록 규제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규제규모를 통제한다면 규제준수를 위한 규제부담의 인식이 규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부분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규제만족도에 대해서는 개별규제

4) 규제에 대한 규범적 인식과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으나, 이들 변수를 포함한 분석모형①-2의 vif 값(2.426)을 살펴볼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Durbin-Watson 값도 1.913으로 잔차의 독립성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의 비용을 완화하는 접근보다 규제건수를 축소하는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통제변수로 포함된 변수 가운데, 종사자 규모에 따른 규제만족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인 이상 대규모 업체에 비해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에서 특별히 규제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100인 이상 업체와는 더 큰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규제만족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①-1	모형①-2
(종속변수= 규제만족도)			
상수		0.072 (0.157)	0.579 (0.261)
규제에 대한 규범적 인식		<b>0.444***</b> (0.055)	<b>0.403***</b> (0.058)
정책과정의 적절성 인식		<b>0.446***</b> (0.043)	<b>0.423***</b> (0.043)
규제수준 인식	규제규모	-	<b>-0.116***</b> (0.035)
	규제부담	-	0.019 (0.037)
업력		0.002 (0.002)	0.002 (0.002)
업종	제조업(화학)	-0.094 (0.092)	-0.095 (0.089)
	제조업(화학 외)	0.097 (0.092)	0.094 (0.091)
	건설업	0.068 (0.092)	0.070 (0.092)
	도소매업	-0.059 (0.089)	-0.054 (0.088)
	숙박/음식업	0.135 (0.097)	0.132 (0.097)
	정보통신업	0.171* (0.093)	0.169* (0.093)



	금융/보험업	-	-
소재지	수도권	-0.029 (0.048)	-0.022 (0.048)
	비수도권	-	-
중소기업	해당	0.057 (0.084)	0.045 (0.083)
	비해당	-	-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0.252** (0.106)	-0.237** (0.105)
	5-50인 미만	-0.094 (0.097)	-0.105 (0.096)
	50-100인 미만	-0.048 (0.117)	-0.030 (0.116)
	100-200인 미만	0.141* (0.079)	0.124 (0.079)
	200인 이상	-	-
응답자 직급	과장급	0.008 (0.051)	-0.003 (0.051)
	차장/부장급	0.087 (0.091)	0.089 (0.090)
	임원/대표이사	-	-
		n=718, F=39.020 adj R-sq=0.474	n=718, F=35.995 adj R-sq=0.481

주) \*\*\*: p<0.01, \*\*: p<0.05, \*: p<0.1

다음은 규제준수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이며, 먼저 본인의 규제준수 인식에 대한 응답결과를 활용한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먼저 모형②-1은 규제만족도 및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결과이며, 정부규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관련해 정부규제에 대한 규범적 인식 수준이 긍정적일수록 오히려 규제준수 인식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긍정적 수용태도가 정책순응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와 상반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보다 심층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책과정의 적절성 인식에 대해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고 있지 못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규제준수를 위한 지원활동이나 규제준수를 위한 감독 및 제재에 대한 경험은 규제준수 인식에 상당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지도점검이나 단속의 경험이 많을수록 본인의 규제준수 인식이 높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에 비해, 규제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험이 많을수록 규제준수 인식이 낮다고 응답하고 있어 방향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행정처분의 경험 자체가 규제 미준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의 경험이 많다고 응답한 업체일수록 당연히 본인이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모형②-2는 추가적으로 규제만족도 변수를 포함한 분석 결과이다. 연구가설과 달리, 규제만족도에 따른 규제준수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현행 정부규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규제준수 인식의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규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나 규제준수 지원활동 및 감독활동이 미치는 영향은 앞선 모형②-1과 동일하게 파악되고 있다.

모형②-3은 규제규모 및 규제부담 수준에 대한 인식을 추가로 포함한 분석 결과이다. 규제규모나 규제부담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규제준수 인식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 결과와 달리, 오히려 규제준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규제규모가 많고 규제부담이 크기 때문에 규제를 잘 준수한다는 해석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규제를 더욱 잘 준수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규제규모나 규제부담이 응답자 개인의 인식 수준을 의미하며, 규제준수에 대한 본인의 행태는 이미 발생한 결과라는 점에서, 규제규모나 규제부담 수준과 비교하여 본인의 규제준수 수준을 높게 인식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규제규모나 규제부담 수준이 정부규제의 중요성이나 영향력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정부규제의 중요성이나 영향력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에 비해 실제로 높은 규제준수 인식을 보일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여하튼, 규제규모나 규제부담 수준 자체가 규제준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 한편, 규제규모 및 규제부담에 대한 변수를 통제한 모형에서, 규제에 대한 규범적 인식은 특별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대신 정책과정에 대한 적절성 인식이 높을수록 규제준수 인식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고 있다. 지도점검 및 단속 경험에 대한 변수도 규제규모와 규제부담에 대한 변수가 포함되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도점검 및 단속 경험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부규제의 중요성이나 영향력과 관련된 변수라고 이

해한다면, 규제규모와 규제부담 수준과도 연계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본인에게 적용되는 규제의 중요도나 영향력을 통제한다면, 정책과정이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동의정도가 규제준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남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본인 규제준수 인식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②-1	모형②-2	모형②-3
<b>(종속변수= 본인의 규제준수 인식)</b>				
상수		4.457*** (0.213)	4.452*** (0.213)	2.282*** (0.298)
규제에 대한 규범적 인식		-0.205*** (0.065)	-0.221*** (0.067)	-0.042 (0.066)
정책과정의 적절성 인식		0.071 (0.052)	0.054 (0.056)	0.111** (0.053)
규제준수 지원활동		0.089* (0.049)	0.087* (0.049)	0.090* (0.047)
규제준수 감독	지도점검 및 단속	0.159*** (0.049)	0.163*** (0.049)	0.056 (0.047)
	행정처분	-0.331*** (0.041)	-0.333*** (0.041)	-0.283*** (0.039)
규제만족도		-	0.038 (0.044)	0.067 (0.042)
규제수준 인식	규제규모	-	-	0.208*** (0.039)
	규제부담	-	-	0.254*** (0.041)
업력		0.001 (0.002)	0.001 (0.002)	0.000 (0.002)
업종	제조업(화학)	-0.120 (0.105)	-0.117 (0.105)	-0.163* (0.099)
	제조업(화학 외)	-0.105 (0.108)	-0.109 (0.108)	-0.137 (0.101)
	건설업	-0.217** (0.108)	-0.220** (0.108)	-0.233** (0.101)
	도소매업	-0.021	-0.019	-0.020

		(0.104)	(0.104)	(0.097)
	숙박/음식업	-0.031 (0.114)	-0.037 (0.114)	-0.020 (0.107)
	정보통신업	-0.041 (0.110)	-0.048 (0.110)	-0.013 (0.103)
	금융/보험업	-	-	-
소재지	수도권	-0.101* (0.057)	-0.100* (0.057)	-0.085 (0.054)
	비수도권	-	-	-
중소기업	해당	-0.195** (0.099)	-0.198** (0.099)	-0.135 (0.093)
	비해당	-	-	-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0.146 (0.127)	0.158 (0.128)	0.048 (0.121)
	5-50인 미만	-0.102 (0.114)	-0.097 (0.114)	-0.098 (0.107)
	50-100인 미만	0.093 (0.137)	0.096 (0.137)	0.019 (0.129)
	100-200인 미만	-0.158* (0.093)	-0.164* (0.093)	-0.136 (0.088)
	200인 이상	-	-	-
응답자 직급	과장급	-0.087 (0.059)	-0.087 (0.059)	-0.026 (0.056)
	차장/부장급	-0.012 (0.106)	-0.016 (0.106)	-0.026 (0.100)
	임원/대표이사	-	-	-
		n=718, F=5.804 adj R-sq=0.118	n=718, F=5.561 adj R-sq=0.118	n=718, F=9.945 adj R-sq=0.223

주) \*\*\*: p<0.01, \*\*: p<0.05, \*: p<0.1

다음은 본인이 아닌 동종업체들의 일반적인 규제준수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이다. 본인의 규제준수 인식은 아무래도 과도하게 응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종업체들의 규제준수 인식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객관적일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규제만족도와 규제수준 인식에 대한 변수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면서 모형변화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본인의 규제준수 인식을 종속변수

로 한 분석결과와 달리, 모형②-5와 모형②-6에서 규제만족도 동종업체의 규제준수 인식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본인의 규제준수는 현행 규제에 대한 만족도와 무관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비해, 타인의 규제준수에 대해서는 규제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앞선 결과와 유사하지만, 규제준수 지원활동 경험이 규제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유의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인의 규제준수와 달리, 타인의 규제준수 수준은 규제에 대한 만족도나 규제준수를 위한 지원활동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모형②-6에서 규제규모 및 규제부담을 크게 인식할수록 규제준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규제규모 및 규제부담이 규제를 준수해야 할 규제의 중요성이나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규모 및 규제수준을 통제한 분석모형에서 정책과정의 긍정적 인식에 대한 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규제만족도에 따른 영향이 더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앞서 본인의 규제준수 인식이 정책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해, 타인의 규제준수 인식은 보다 포괄적인 규제만족도와 지원활동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동종업체 규제준수 인식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②-4	모형②-5	모형②-6
<b>(종속변수= 동종업체의 규제준수 인식)</b>				
상수		3.939*** (0.198)	3.925*** (0.197)	2.479*** (0.285)
규제에 대한 규범적 인식		<b>-0.162***</b> <b>(0.060)</b>	<b>-0.203***</b> <b>(0.062)</b>	-0.085 (0.063)
정책과정의 적절성 인식		0.054 (0.048)	0.011 (0.052)	0.052 (0.051)
규제준수 지원활동		<b>0.151***</b> <b>(0.046)</b>	<b>0.147***</b> <b>(0.046)</b>	<b>0.145***</b> <b>(0.045)</b>
규제준수 감독	지도점검 및 단속	0.032 (0.045)	0.041 (0.045)	-0.029 (0.045)

	행정처분	-0.132*** (0.038)	-0.136*** (0.038)	-0.103*** (0.037)
규제만족도		-	0.096** (0.041)	0.118*** (0.040)
규제수준 인식	규제규모	-	-	0.159*** (0.038)
	규제부담	-	-	0.149*** (0.040)
업력		-0.002 (0.002)	-0.002 (0.002)	-0.003 (0.002)
업종	제조업(화학)	0.103 (0.097)	0.110 (0.097)	0.084 (0.094)
	제조업(화학 외)	-0.113 (0.100)	-0.122 (0.100)	-0.138 (0.097)
	건설업	-0.046 (0.100)	-0.053 (0.100)	-0.061 (0.097)
	도소매업	-0.019 (0.097)	-0.013 (0.096)	-0.015 (0.093)
	숙박/음식업	-0.078 (0.106)	-0.092 (0.106)	-0.081 (0.103)
	정보통신업	-0.082 (0.102)	-0.098 (0.102)	-0.077 (0.099)
	금융/보험업	-	-	-
소재지	수도권	-0.012 (0.053)	-0.009 (0.053)	-0.001 (0.051)
	비수도권	-	-	-
중소기업	해당	-0.119 (0.092)	-0.126 (0.092)	-0.085 (0.089)
	비해당	-	-	-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0.196* (0.118)	-0.167 (0.119)	-0.239** (0.116)
	5-50인 미만	-0.266** (0.106)	-0.254** (0.106)	-0.252** (0.103)
	50-100인 미만	-0.060 (0.128)	-0.053 (0.127)	-0.105 (0.124)
	100-200인 미만	-0.171** (0.086)	-0.185** (0.086)	-0.163* (0.084)

	200인 이상	-	-	-
응답자 직급	과장급	-0.114** (0.055)	-0.115** (0.055)	-0.075 (0.053)
	차장/부장급	0.070 (0.099)	0.061 (0.098)	0.054 (0.095)
	임원/대표이사	-	-	-
		n=718, F=3.587 adj R-sq=0.067	n=718, F=3.698 adj R-sq=0.073	n=718, F=5.630 adj R-sq=0.129

주) \*\*\*:  $p < 0.01$ , \*\*:  $p < 0.05$ , \*:  $p < 0.1$

### 3. 주요 결과해석 및 논의사항

기업의 정부규제 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 그리고 규제규모 및 규제부담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관련해, 다음의 몇 가지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규제에 대한 만족도는 규제준수 인식에 대한 암묵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암묵적인 영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응답자가 자신에 대한 규제준수 인식과 타인에 대한 규제준수 인식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타인의 규제준수 인식에서만 규제만족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규제에 대한 만족도와 무관한 독립변수로 인식하고 있으며, 규제에 대한 만족도와 무관하게 규제를 준수한다는 인식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준수를 위한 지원활동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본인의 규제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도의 유의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즉, 본인의 규제준수 결정에 대해서는 당위적이고 의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에 비해, 타인의 규제준수 결정에서는 현행 규제에 대한 만족도나 준수 과정에서의 지원활동에 따른 영향요인이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규제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규제준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저변에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원칙주의적 접근방식이 본인의 규제준수 태도를 설명하는데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규제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라, 정책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본인의 규제준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타인의 규제준수를 이해하는 상황에서는 현행 규제수준이 만족스럽고 규제준수를 위한 지원조건이 좋을수록 규제준수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는 상황론적 접근방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인과 타인의 규제준수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며, 결국 본인의 명시적인 응답과 달리, 암묵적으로는 규제만족도에 따른 규제준수 인식의 영향관계도 인정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둘째, 규제규모에 따른 규제수준은 규제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유의미한 변수로 파악되나, 그 이상으로 정부규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수준이 규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부규제의 지속적인 정비노력과 실적에도 불구하고 규제만족도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론 규제정비보다 더 많은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규제규모가 증가한 결과에 따른 규제만족도의 저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규제의 규범적 소망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급격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최근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규제를 통한 정부개입의 효용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규제규모의 변화와 무관하게 규제만족도가 낮게 조사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반대의 상황도 가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규제만족도가 낮게 측정되는 원인은 정부규제 자체에 대한 규범적 인식의 변화도 주된 원인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정부규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 수준 자체가 현행 규제의 만족도에 대한 판단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 인식 수준 외에, 규제규모에 따른 규제만족도의 변화 가능성도 유의하게 확인하고 있다. 다만, 규제규모를 통제된 상황에서 규제준수를 위한 부담수준의 크기가 규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부분은 기존의 일반적인 예상과 다른 결과로 이해된다. 물론 규제부담 수준이 장기적으로 정부규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정부규제에 대한 동일한 인식수준을 전제한 상황에서 규제부담 수준의 단기적 변화는 규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물론 규제부담 수준의 완화에 대한 중요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규제만족도라고 하는 주관적인 판단에 있어서 구체적인 규제준수 부담 수준에 따른 차이보다는 정부규제의 적용여부나 적용규모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규제만족도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전략의 관점에서 고려한다면, 규제부담을 경감하는 규제개선 방식보다, 해당 규제의 폐지 등을 통해 규제규모 자체를 축소하는 규제개선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논의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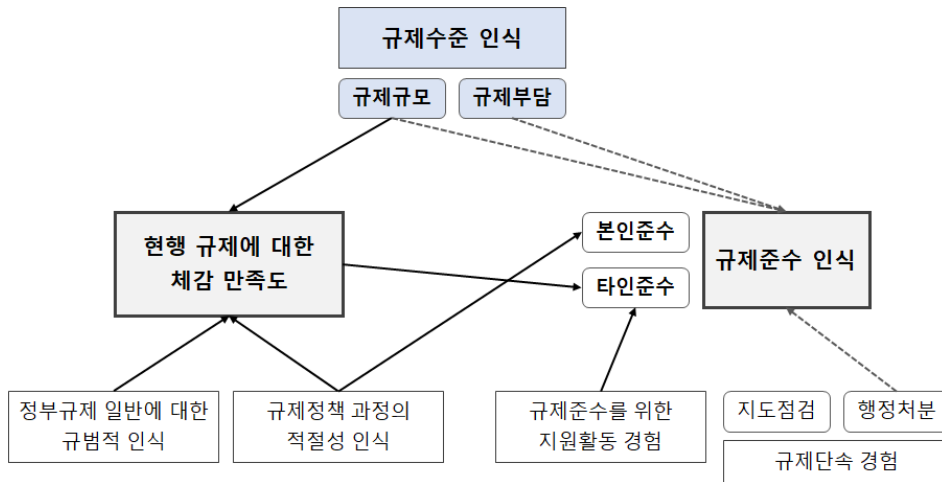
셋째, 규제규모나 규제부담에 따른 영향이 규제준수 인식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명확히 확인되나, 규제수준에 따른 영향이 규제준수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규제준수 수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조건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과정에서 함께 포함되었던 규제 미준수 원인에 대한 문항과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규제가 과다하다는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8.7%가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규제준수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47.8%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규제의 규모와 준수부담이 규제준수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응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규제준수 인식과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규제규모가 많고, 규제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기업일수록 규제를 잘 준수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렇게 상이한 결과는, 본 연구가 응답자의 인식에 따른 규제수준과 규제준수 인식을 연계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업의 일반적 특성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기업에 적용되는 실제 규제수준은 크게 차이가 없더라도, 기업이 인식하는 규제의 규모나 부담 수준은 상이할 수 있으며, 규제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기업일수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준수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과다한 규제와 높은 규제부담 수준은 기업의 규제준수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며, 이러한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규제준수를 달성했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규제준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응답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규제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 경험이 있는 기업일수록 규제준수 인식이 낮다고 응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이 규제준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규제준수 수준을 판단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의 규제준수와 관련해서,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7.6%에 불과하다. 규제준수를 위한 부담정도에 대해서,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전체의 9.1%에 불과하다. 보통이라는 응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규제에 대한 준수부담을 느끼면서도,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즉, 규제부담 수준에 따른 장애요인에도 불구

하고,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규제부담의 경감을 통해 규제 미준수 비율을 개선할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인식이 줄어들 가능성도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규제수준의 경감 필요성을 절하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앞서 규제만족도에 대한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규제준수 역시 규제규모나 규제부담 수준의 경감을 통해 단순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현재의 정부규제에 대한 만족도가 정부규제에 대한 규제준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규제의 양적인 규모나 준수부담 수준은 만족도나 규제준수 인식에 긴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규제에 대한 만족도가 규제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며, 규제규모 및 규제부담 수준이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에 대한 인식에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규제의 규모나 부담 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규제만족도는 낮아지면서,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다는 인식은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지와 제한의 형태로 집행되는 규제정책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규제자인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규제준수를 이끌어내는 것은 일견 배치되는 목표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규제만족도와 본인의 규제준수 인식에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규제만족도가 타인의 규제준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부분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규제정책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규제만족도를 제고하여 규제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원칙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 간의 관계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 인식의 관계모형 재구성



주) 실선은 인과적 영향관계, 점선은 조건적 영향관계

## IV. 결론

본 논문은 규제정책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두 가지 변수, 규제만족도와 규제준수에 대한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높은 준수 수준으로 당연히 이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피규제자인 기업이 만족도와 규제준수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책만족과 정책준수 간의 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부단한 규제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규제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규제만족도 저하가 규제준수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본 연구를 시작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규제만족도가 규제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타인의 규제준수 인식에 대한 분석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본인의 규제준수 인식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암묵적 영향관계로 해석하였다. 타인을 통해 비춰본 규제준수 인식에서는 규제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변수라고

분석되고 있으나, 정작 본인의 규제준수 인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타인의 규제준수와 달리, 본인의 규제준수에 대해서는 규제자와의 교환적 관계를 낮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규제만족도는 낮게 응답하고 있으나, 본인의 규제준수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강조하여 응답하고 있는 사례들을 고려하면, 원칙적이지만 다소 형식적인 규제준수의 행태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규제수준의 인식에 따른 영향에서도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규모나 부담수준에 따른 부정적 요인을 크게 인식할수록 적극적인 규제준수를 응답하고 있다.

물론 개인적 차원의 규제만족 정도에 따라 규제준수 수준을 결정하는 교환적 관계모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높은 규제부담과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규제준수 수준을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형식적인 법규 중심의 규제준수가 만연할 가능성을 우려케 한다. 실질적인 규제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규제수준 및 규제준수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실제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연구의 중요한 한계점으로 고백한다. 보다 정교하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제상·김종래. (1996).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5(2): 90-112.
- 국무조정실. (2003).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지침.
- 김태윤. (2000). 「규제준수와 시장친화성」, 한국행정연구원.
- 박영효·정운수. (2001). 규제순응의 확보전략: 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한국행정연구」, 10(2): 173-200.
- 박중훈·김판석. (1996). 「행정서비스 종합대책의 구상: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평가지표 개발」, 한국행정연구원.
- 소영진. (1999).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8(2): 183-204.
- 윤종철. (2004).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전략,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민호·이종한·임동진. (2008).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설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총리실 연구용역 보고서.
- 이시철. (2005). 규제순응의 동기 요인 및 그 상대적 크기 비교가능성, 「한국행정학보」, 39(4): 347-368.
- 정운수. (2004). 규제순응 확보를 위한 규제다원주의적 접근, 「지방정부연구」, 8(2): 329-348.
- 최선마·김태형. (2020). 정부역량이 정책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책지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4(3): 125-148.
- 한승준. (2002). 서울시 무료통역 택시제도의 정책순응성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12(3): 165-186.
- Alford, J. & Speed, R. (2006). Client Focus in Regulatory Agencies : Oxymoron or Opportunity?, *Public Management Review*, 8(2): 313-331.
- May, P. & Winter, S. (1999). Regulatory Enforcement and Compliance: Examining Danish Agro-Environmental Policy,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8(4): 625-651.

##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y Satisfaction and Regulatory Compliance Perception: An Empirical Analysis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n the Amount of Government Regulations

Minho LEE, Saungah SAU, Moonsun KANG, Jeongyoon BAE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regulatory satisfaction and regulatory compliance perception on government regulations,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n the amount of government regulation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718 businesses nationwide from July to October 202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ffect of a company's regulatory satisfaction on regulatory compliance perception was limited in the analysis of others' regulatory compliance perception, but not significant in the analysis of their own regulatory compliance perception. In this study, this was interpreted as an implicit influence relationship, which the satisfaction with regulations turn out to be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perception of regulatory compliance of others, but it is not explicitly found in the perception of regulatory compliance of themselves. It can be explained that their own regulatory compliance is perceived as having a low exchange relationship with regulators, contrary to other people's regulatory compliance.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cases in which

regulatory satisfaction is low, but excessive emphasis is given to one's own regulatory compliance, it is possible to expect a principled but quite passive behavior of regulatory compliance. Of course, it cannot be said that an exchange relationship model that implies the level of regulatory compliance determined by the degree of individual regulatory satisfaction is desirable. Moreover, there is no need to negatively interpret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However, the increasing rate of responding to high regulatory compliance levels despite high regulatory burden and low satisfaction raises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failing substantial and active regulatory compliance. It can be suggested to seek long-term and fundamental improvement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ory compliance.

Keyword: Government Regulations, Regulatory Satisfaction, Regulatory Compliance

